

국내외 역차별·구글세... 이해진·김범수 증인 또 나오나

과방위 국감 D-2

삼성·LG전자·이통사 CEO 증인대 ‘드루킹 댓글조작’ 집중 질문 전망 5G 장비 화웨이 선정 여부 도마위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기업의 대표들이 줄줄이 채택됐다. 국감을 앞두고 IT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IT 업계의 민감한 이슈들이 총동원 돼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와 삼성·LG전자 등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이뿐 아니라 양대 포털사 대표이사들도 모두 부르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뉴스 재배포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이에 따라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각각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됐다.

당초 여야는 해당 분야 실무자의 참석을 협의했지만, 회의 후 대표이사로 격상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인물로는 이해진·김범수 창업자가 꼽힌다. 이번 증인 채택은 자유한국당이 강하

게 요구한 만큼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의 공정성 등에 대한 날선 질문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던 이해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은 지난해 국감에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메인 개편안’을 공개하기도 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가계 통신비 이슈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지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의 경우 지난 8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내년 상용화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업체로 화웨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ICT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브랜드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 한국법인 대표들 또한 지난해 과방위 국감 때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이들이 국내 ICT 기업과 역차별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은 외국

계 IT 기업 대상으로 세금 회피를 막자는 취지에서 ‘구글세’를 걷자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올해 국감 게임 분야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채택됐다. 김택지 엔씨소프트 대표와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다.

국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은 과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블루홀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문제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등은 CEO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1일 오전 국회 의정실실에서 회동하며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국감 D-2

與 “평화는 경제” vs “민생은 부재” 野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한 해 문재인정부가 거둔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실패로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야당이 국감 무대에서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띠 전망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충돌한 지난해 국감과는 다른 양상을 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야당의 거친 공세는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태세다.

이 과정에서 고용지표 악화 등의 근본 원인을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과해치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본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 파탄’을 국감장에서 부각, 정부·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계산이다. /연합뉴스

평양갔다 서울 온 폼페이오 ‘보따리’에 관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협의 평화협정·비핵화 등 수순 시작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에서 들은 ‘선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에서 서울로 날아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저녁에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 결과 등에 대해 공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엔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을 예방한 폼페이오 장관은 8일엔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측 인사와 역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네번째 평양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을 잡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곧 종전선언 이후의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수순이 시작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고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앞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별개의 문제임도 강조했다. 특히 이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도, 미국도 같은 생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 폭스(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65년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흘러왔기 때문에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에 이르게 된다”면서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도 비핵화 방법론과 과정에 대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완전한(현재) 핵 신고를 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에 대해 북한이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 종전선언을 위한 첫 단추를 꿰고 향후 진행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 그리고 평화협정을 거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는 곧 김 위원장이 지난 평양정상회담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노력을 미국이 인정하고, 그동안 종전선언에서 소외되는 듯 했던 중국까지 포함한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빠른 시점에 할 경우 한반도 문제가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승호 기자 bada@